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MIDDLE MARKET ENTERPRISES POLICY BRIEF

FOMEK

vol.6 2022.6.1~6.30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- 이창양 산업부 장관, 중견련 방문 (6.8)
 - 중견기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6.8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과 간담
 -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,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,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, 심진수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새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방향과 중견기업계 애로를 공유

정책동향

- [기획재정부] 2022년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(6.8)
 - 세계은행(World Bank)이 6.7일 「세계경제전망(Global Economic Prospects)」을 발표하고, 코로나19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, 공급망 불안정성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'22.1월 대비 1.2%p 하향한 2.9%(선진국 2.6%, 신흥·개도국 3.4%)로 전망
- [국무조정실]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(6.14)
 - 한덕수 국무총리는 ▲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, ▲퇴직공무원, 연구기관, 경제단체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운영, ▲규제심판제도 도입, ▲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, ▲규제품질관리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「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」을 발표
- [기획재정부]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(6.16)
 - 정부는 '저성장 극복과 성장-복지 선순환'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*과 당면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담은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을 발표
 - * ① 민간중심 역동경제, ② 체질개선 도약경제, ③ 미래대비 선도경제, ④ 함께가는 행복경제
- [산업통상자원부] 새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발표 (6.17)
 -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「새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」 발표

- (주요내용) ▲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(Mega Impact) 프로젝트 추진, ▲파괴적 혁신(Disruptive&Drastic Innovation) R&D 사업 신설, ▲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TVC(Tech Value Chain) 구축, ▲R&D 제도 개선*, ▲국제 공동 R&D과제 확대 등
- * ① R&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확대(500억원→1,000억원), ②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수(중소3개, 중견5개) 전면 폐지, ③ 초기 중견기업(매출액 3천억원 미만) R&D 자기부담률 하향 조정(50%→33%)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(6.17)

-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“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”을 추진하며, 성장정체에 직면한 기업의 기술역량을 진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'26년까지 총 480억을 투입할 예정

●●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석·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1곳 신규 선정 (6.21)

-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‘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’과 ‘100만 디지털 인재양성’을 이행하기 위해 석·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1곳을 신규 선정·지원하며, 선정된 대학에 사업별*로 5년~8년간 연 5억원~20억원 지원
- *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사업(6개 대학),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(5개 대학), 정보통신기술 혁신인재4.0사업(10개 대학)

●● [국토교통부]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(6.21)

-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*과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방안** 등을 담은 ‘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’을 발표
- *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,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 해소,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
- **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,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

●● [관세청]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개통 (6.22)

- 수출입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된 빅데이터 분석모형을 제공하는 ‘관세청 빅데이터 포털’을 개통하여 맞춤형 지원사업, 유사 품목분류 사례, 수출입 트렌드 등의 기능을 제공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(6.23)

-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은 ‘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’과 에너지 부문의 당면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‘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’ 발표

●● [고용노동부]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(6.23)

-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「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」을 발표하고, 우선추진과제로 ‘근로시간 제도 개선*’과 ‘임금체계 개편**’을 제시
- *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검토,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마련, 유연근로제 활성화 등
- **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·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지원, 임금체계 개편 관련 애로 해소 지원, 고령자 계속 고용 관련 제도개선 검토 등

- [제20대 대통령실] 대통령실의 새로운 소통창구 ‘국민제언’ 신설 (6.24)
 - 대통령실은 ‘청와대 국민청원’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창구로 ‘국민제언’을 신설
 - 매월 특정 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소통 이벤트를 진행하며, 이 달의 주제는 소상공인, 스타트업, 중소기업,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‘기업고충’으로 6.23일부터 7.11일까지 의견 접수
-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(6.27)
 - 지난 5월 ‘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간담회’에서 제기된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산·학·연 논의를 거쳐 「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」 발표
 - (주요내용) ①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, ②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추기 시장수요 창출, ③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·학·연 협력 생태계 조성, ④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인력 7,000명 양성 등
- [기획재정부]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(6.30)
 -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분야·시기·기관별로 알기쉽게 정리한 「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 발간

입법동향

1 정부

- [고용노동부]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(6.1)
 - 「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을 개정하여 ▲스마트 안전장비, ▲위험성평가 발굴 품목, ▲휴게시설, ▲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등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 확대
-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6.7)
 -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규제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안정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특례 사업을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6.7)
 -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▲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, ▲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 도입, ▲우주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등 추진
- [환경부]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(6.8)
 -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4개 제품(철강제품, 전기 냉동·냉장고, 텔레비전, 공기청정기) 개별 지침 신설을 위한 「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」 고시 개정안을 6.9일부터 6.30일까지 행정예고
- [산업통상자원부]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(6.22)
 - ‘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’를 주요내용으로하는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을 6.22일부터 8.1일까지 입법예고

- (주요내용)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희공간에 설비를 신규·추가 도입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고,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, 법인세 등 세제 감면, 고용창출장려금 등 지원 제공

●● [국토교통부] 공동주택분양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비사업 등 필수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(6.27)

- ‘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’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반영하고,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과 「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」 제정안에 대해 6.29일부터 7.11일까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

2 국회

●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정민 의원, 6.3)

-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입증요건을 완화하고,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

●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진표 의원, 6.3)

- 재생에너지 연구개발(R&D)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하여 실효성있는 세제혜택 제공

●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 의원, 6.13)

- 신성장·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

●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 의원, 6.10)

-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하향 조정

●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익동 의원, 6.20)

-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
●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 의원, 6.9)

-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

●●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우택 의원, 6.29)

-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

●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국 의원, 6.9)

- 원재료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·개정 및 사용 제도화
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 의원, 6.14)
 -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 등의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,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대금에 원재료 가격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
-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우원식 의원, 6.27)
 - 가맹본사가 허위·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, 그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들에게 알리고, 가맹본사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거 마련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 의원, 6.10)
 -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인에게는 그 법인 소속 행위자의 벌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 의원, 6.13)
 -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침해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기의 구체적 사용형태를 제시해야하는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,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 의원, 6.10)
 -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, 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함
-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 의원, 6.10)
 -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,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
-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경준 의원, 6.27)
 - 비과세하는 일직료, 숙직료 등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*,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도록 함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보승희 의원, 6.27)
 - 현행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 의원, 6.24)
 -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, 인권, 노동, 안전·보건, 반부패, 소비자, 공급망 관리,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,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·사회·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·공시하도록 함
-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(김승수 의원, 6.27)
 - 메타버스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, 메타버스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근거 마련
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오섭 의원, 6.30)

-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 대상 운송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로 확대하고, 시멘트를 시멘트 원료와 그 가공품으로 명확하게 규정
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 의원, 6.30)

- 일부 운송품목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적용대상을 확대*하고, 2022년까지인 유효기간을 폐지

* (현행) 2개 품목(컨테이너, 시멘트) → (확대) 7개 품목(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,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, 철강재, 위험물질, 자동차, 곡물 및 사료, 택배 지·간선차)